

고건 - 한화갑 정계개편 날 세우나



“원탁회의 통해 대통합” “반한 연대 신당안된다”

정계개편이 논의가 급물살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고건 전 국무총리와 민주당 한화갑 대표의 주도권 쟁탈전이 치열하다. 이들은 노 대통령의 탈당 시사 발언 이후 정계개편 방향에 대해 명확한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명분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고 전 총리는 중도실용 노선 추구를 통한 반한나라당 연대를 꿈꾸고 있고, 한 대표는 민주당 중심의 흡수 신당 추진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소통합으로 나라 못이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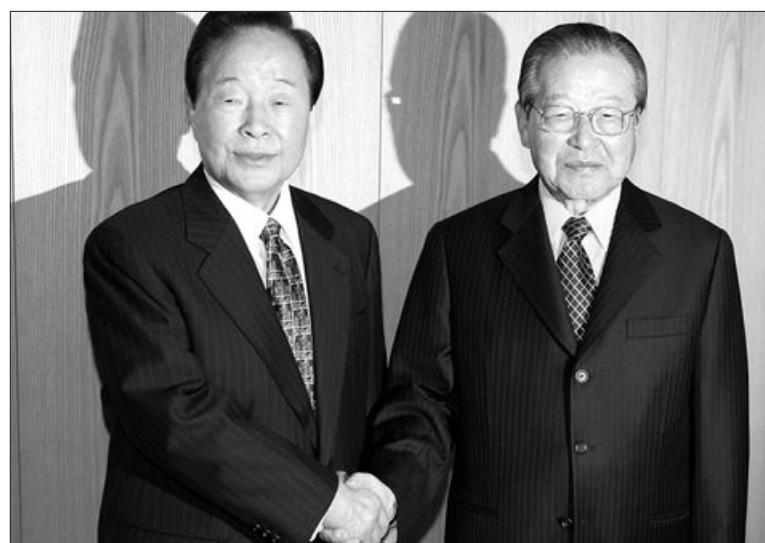
정파 초월한 중도 실용 추구



YS-JP 만찬회동

DJ·현정부 강력 비판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는 지난 달 30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만찬회동을 갖고 현 시국에 대한 의견을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가 지난달 3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만찬회동을 갖기 전 약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 분열이 쉽지 않다고 볼 때 반한나라당 연대를 통한 정국 주도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는 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일각에서 원탁회의 출범에 부정적 기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모든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은 힘든 것 아니냐. 여야 지도부도 원탁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고, 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 등에 대한 견제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한화갑=한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민대 특강과 30일 조선대 특강 등에서 ‘반한나라당 연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한나라당을 견제하기 위해 민주세력이 뭉치자는 지적이 있다”고 전제한 뒤 “민주화를 위해 싸운 사람들은 대의를 위해 합지는 것은 좋으나, 누구를 망하게하고 적으로 삼고, 비난하고 짓밟으려고 뭉치는 것은 정정당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당통합 주장에 대해 “열린우리당 사람에게 명분을 주기 위해 제3지대에서 새로운 신당을 만들자고 했지, 통합을 하자는 말은 해본 적이 없다”며 “민주당은 정책성과 전통성

“민주 중심 헤쳐모여 바람직

고건 신당과 합칠 생각 없어”

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중심에 서야 하고 ‘도로민주당’이 당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헤쳐모여식 신당창당’ 과정에서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나가겠다는 뜻을 보다 분명히 하면서 향후 신당창당 과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민주당 독자생존 노선’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그의 이같은 주장은 고건 전 총리의 입장과는 명확히 차이를 드러낸다. 고 전 총리가 민주당 중심의 정계개편에 합류해야 한다는 속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한 대표는 이와 관련 “고 전 총리가 신당창당을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없는

가”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있다. 고건 신당은 실체도 없다”고 답했다. 고건 신당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답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발히 개진해왔다.

이 특보는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물려난 이후에도 정책특보들은 줄곧 유지하면서 직간접적인 정책자문 역할을 해왔으나, 대통령 특보지 혜택에 따라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공식 직책은 갖지 않게 됐다. /연합뉴스

전남 한·미FTA 피해

보리·쇠고기·돼지고기順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전남 농축산물 가운데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은 보리(400억원)와 쇠고기(340억원), 돼지고기(130억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 국장은 “이같은 수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시나리오와 10년내 관세철폐를 가정하여 분석한 추정치로 협상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도정질문에 나선 이기범 의원(민주·나주1)은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400억원 가량의 가장 많은 생산액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이어 현행 관세율은

40%지만 미국측이 가장 강력히 개방을 요구하는 쇠고기가 340억원, 돼지고기가 130억원 등 품목에 따라 15억 원에서 400억원 가량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이같은 수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시나리오와 10년내 관세철폐를 가정하여 분석한 추정치로 협상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도정질문에 나선 이기범 의원(민주·나주1)은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400억원 가량의 가장 많은 생산액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이어 현행 관세율은

나눴다.

두 사람의 회동은 2004년 17대 선 직후 두 차례 만난 이래 2년여만이다. 두 사람은 당초 17일 만날 계획이었으나 김대중(DJ) 전대통령이 사실상 정치활동을 재개한 것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것을 우려해 회동을 취소했었다.

만찬회동에 동석한 서청원 전 하나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두 분 말씀 중 80%는 현 정부의 잘못을 질책하고 충고하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서 전 대표는 “두 분께서는 지난번 DJ와 노무현 대통령의 만남은 ‘정치적 압이며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당적 및 하야 시사 발언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측근은 “두 사람이 최근 목포 방문 및 노 대통령과의 회동 등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 DJ가 차기 대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좌파정권을 연장할 가능성을 대해 우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임동우기자 tuim@kwangju.co.kr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5·31 선거 당선자’

광주·전남 42명 기소

광주·전남지역 5·31 지방선거 당선자 중 42명이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거과 관련, 공무원이 입건된 경우가 지난 6·13 지방선거에 비해 6% 증가, 지방공무원들의 즐서기 현상도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30일 “광주·전남지역 전체 당선자 중 80명을 입건, 이 중 42명을 기소하고, 38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광역 및 기초의원의 경우는 서체원 광주시 의원을 비롯해 모두 35명이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전남 전체 선거사법 입건자는 964명이었고 이중 678명이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기아시
김대중 원장 초빙 강의!!**
2006년 12월 2일(금) 오후 2시
한국대학원 대학원생 대상
한국대학원 대학원생 대상
한국대학원 대학원생 대상

**광주건축
토목학원**
전남광주 대학원생 대상
전남광주 대학원생 대상
전남광주 대학원생 대상



매일밤 8시부터 쑐! 쑐! 쑐! 애들은 가라!!

설운도
12월 7, 8일

무등산전국 100%

광주상무 나이트

